

세계지방자치동향



지방행정

- (한국) 새로운 지역형 평생교육정책: 경상북도 도민행복대학
- (일본) 일본 지자체의 탈탄소 정책의 현황과 과제

지역발전

- (일본) 일본 지방의 협력적 지원 전략 「간사이 광역연합」
- (스페인) 바르셀로나 슈퍼블록(Superblocks) 지역발전 프로젝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새로운 지역형 평생교육정책 : 경상북도 도민행복대학

경북지역 인구변화 및 평생교육정책 과제

- 최근 경상북도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1 | 경상북도 인구변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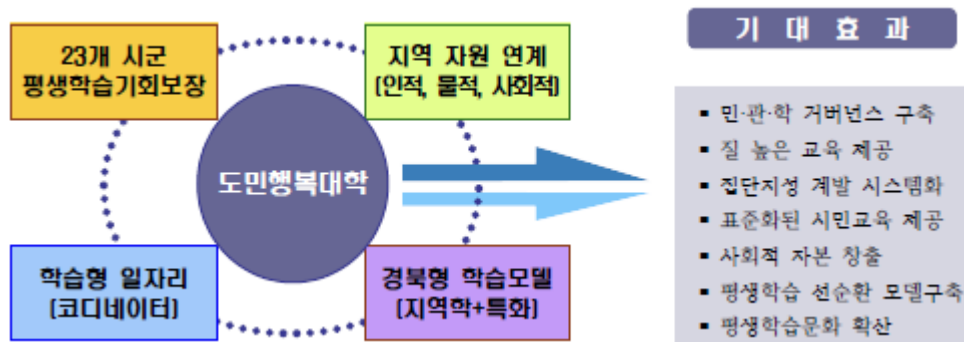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출생아 수	13,521	12,048	-1,473(-10.9)
사망자 수	19,676	20,824	+1,148(+5.8)
인구 자연감소	12,048	20,824	-8,755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2021) 자료를 필자가 분석

- 해당 인구변화에 따라 도내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기존의 기초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대학, 노인대학, 정보화대학, 장수대학, 농업대학 등은 특정 대상에 한정된 대규모의 일회성 강좌 형태로 지속성이 높지 않음
- 연령층, 소득수준, 소득원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상북도는 ‘도민행복대학’을 운영 중임

경북 도민행복대학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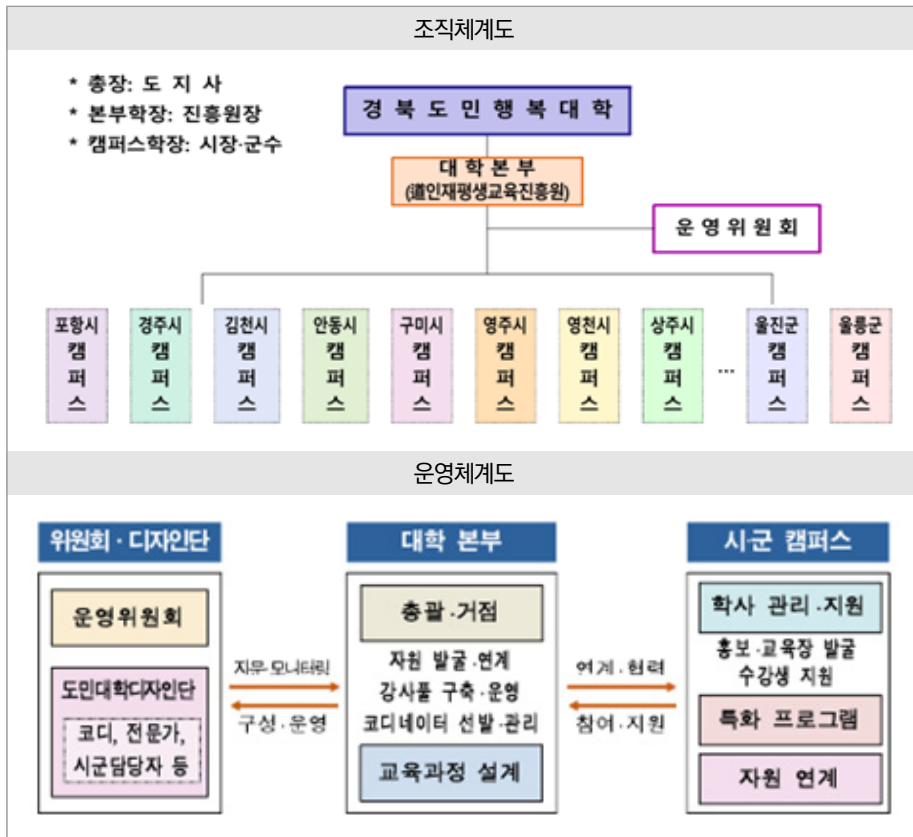
- 경북 도민행복대학은 경상북도 내 지역 간 교육 격차, 기존 프로그램의 비실효성 등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시작된 새로운 지역형 평생교육 추진 체계임
- 도민행복대학은 2021년 1기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교육과정이 진행 중임(12월 중 종료 예정)
- (운영목적) 도민행복대학의 운영은 ① 시군별 평생교육 격차 해소 및 지역 경쟁력 강화, ② 도정 철학 공유, 시민의식 함양 등 평생학습을 통해 도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학습공동체 문화 확산, ③ 지역학, 시민학, 인문학 등 7대 영역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함



자료: 경상북도 도민행복대학 추진계획(2021) 인용

Ⅰ 그림 1 | 경상북도 도민행복대학 주요내용

- (추진) 도민행복대학은 1개의 대학본부와 23개 시군 캠퍼스로 구성되며, 2021년 현재 19개 캠퍼스가 개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운영) 도민행복대학은 운영위원회, 대학본부, 시·군 캠퍼스 간 자문모니터링, 연계, 협력, 구성, 운영, 참여, 지원 등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함
 - 운영위원회 및 디자인단
 - *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의견 제시, 도민행복대학 홍보, 아이디어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함
 - * 주요활동은 캠퍼스별 월례회 운영, 분기별 전체회의, 권역별·기능별 워크숍 개최, 우수 활동 및 아이디어 발굴·제안자 표창 등임
 - * 시·군 캠퍼스별 5명 정도로, 세부적으로는 시군 실무자, 코디, 전문가, 학습자 등으로 구성됨
 - * 학사과정에 맞추어 1년 단위로 임명·운영하며, 운영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해촉됨
 - 대학본부
 - * 도민행복대학 운영 총괄 업무를 수행함
 - * 경상북도 인재평상교육진흥원 내 설치하며, 전담인력 3명으로 구성됨
 - * 주요활동은 학사과정 설계, 강사풀 구축, 강사 및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시군 캠퍼스 운영 지원, 지역자원 발굴·연계, 홍보 등임
 - 시·군 캠퍼스
 - * 도내 기초지자체별로 운영하며, 각 캠퍼스는 코디네이터 선발·배치, 입학생 모집, 캠퍼스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함
 - * 대학, 기업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기능을(공간, 사람 등) 수행함
 - * 과정별 또는 지역별 거점 캠퍼스를 지정할 수 있음



자료: 경상북도 도민행복대학 추진계획(2021) 인용

| 그림 2 | 경상북도 도민행복대학 조직 및 운영체계도

-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7대 영역으로 구분하며 공통과정과 특화과정으로 각각 편성됨
 - ① 공통과정: 경북학, 시민학, 미래학,
 - ② 특화과정: 사회·경제, 생활·환경, 문화·예술, 인문학
 - 시군 캠퍼스별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특화과정 외에도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체험활동 등의 편성이 가능함

| 표 2-1 | 7대 영역별 교육 목표 및 교육내용

교육분야	교육목표	교육내용
경북학	경상북도와 해당 시군에 대해 바로 알고,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는 시민의식 고취	경북 역사, 전통, 지리, 인물, 생태, 환경, 교육, 문화, 예술, 관광, 콘텐츠, 지역 산업, 경제, 문화유산 등

교육분야	교육목표	교육내용
인문학	자신의 가치와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나와 타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도민	문학, 역사, 철학, 고전, 교양상식, 배려, 자연, 소통, 대중문화, 세계문화, 여행인문학, 심리 등
시민학	민주주의와 사회윤리를 알고 실천하는 공동체적 소양을 지닌 도민	인권, 민주주의, 주민자치, 지역사회학, 공동체, 시민리더, 공공선 등
사회·경제	국가와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대응할 수 있는 도민	사회, 경제, 시장, 국가, 다문화, 지역, 부동산, 마케팅 등
생활·환경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바로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도민	일상생활, 가정, 환경, 부모자녀교육, 건강, 안전문화, 생활기술 등
문화·예술	문화를 향유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도민	(대중)문화, 예술, 문화재, 현대문화, 대중음악, 공연예술
미래학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기 주도적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도민	과학기술, 기후, 4차산업혁명, 지구적 거버넌스, 인류미래문명 등

시사점

- 경북 도민행복대학은 기초지자체별 캠퍼스 운영으로 인해 인력, 운영기간 및 시간,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의 전반적인 내용이 지역마다 다르며 독립적임
- 따라서 기존 시민·도민대학의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일괄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는 달리,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독립적·능동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기초지자체별 인력, 재정, 교육 인프라 등의 차이에 따라 지역 간 프로그램 및 교육 격차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경북 도민행복대학은 경상북도가 총괄하고 시군별 캠퍼스가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및 운영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광역-기초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경상북도는 인력 운용, 기본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정책 추진 및 지역 캠퍼스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수강생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상 지원·관리를 위한 광역-기초 간 공동 채널 구축 및 운용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 지자체의 탈탄소 정책의 현황과 과제

탈탄소 정책 도입의 배경

- IPCC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Carbon Netzero)의 경로를 제시
-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6)에서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2℃ 이내, 가능하다면 1.5℃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재확인
- 2020년 스가 일본 전 총리가 국회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또한, 2021년 4월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삭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50% 삭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도전하겠다고 선언
- 일본 정부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2021년 일부 개정: 정부와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및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
- 2000년대 이후 지자체가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4년 교토시가 처음 제정한 이후로 많은 지자체가 관련된 조례를 제정
- 지자체가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 2021년 11월 30일 현재 40都道府県、295市、14特別区、119町、24村이 표명, 일본 총인구의 88.3%를 차지하고 있음

정부·지자체 탈탄소 실현회의(国·地方脱炭素実現会議)

- 설립배경: 스가 전 총리가 2050년 탈탄소 중립을 선언할 때에 정부와 지자체가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체 조직을 설립하겠다고 표명
- 설립목적: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2050년까지 탈탄소 및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 또한 로드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관계를 구축
- 정부·지자체 탈탄소 실현회의를 2020년 12월 24일 처음으로 개최, 회의의 구성원은 내각관방장관(의장), 환경대신과 총무대신(부의장), 4명의 대신(내각부특명담당대신(지방장생), 농림수산

대신,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 6개 지역(長野県知事, 軽米町長, 横浜市長, 津南町長, 大野市長, 岐阜市長)의 자치단체장으로 구성

- 2021년 6월에 「지역 탈탄소 로드맵」을 발표: 지방에서 시작되는 다음 세대로의 이행전략을 핵심 메시지로 선정, 지역 탈탄소는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매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창생에 공헌한다는 메시지를 포함. 특히 2030년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 및 시책을 중심으로 지역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
- 탈탄소를 지역성장의 기회로 삼아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시민 등 지역의 관계자들이 주역이 되어 지역 탈탄소 정책을 실시, ①현재 이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을 이용, ②재생에너지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 ③지역의 경제활성화, 재난방지 및 생활의 질 향상 등 지역과제의 해결에 공헌

지역 탈탄소 로드맵의 대책 및 시책

- (1) 2025년까지 실행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인재·기술·정보·자금을 적극지원
 - 2030년까지 적어도 100군데의 「탈탄소선행지역」을 선정: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의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환경성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탈탄소를 향한 선행적인 정책 및 시책을 실시. 이러한 선행지역에서의 탈탄소정책을 통해 지역과제 해결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
 - 전국적으로 중점대책을 실시: ①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의 도입, ②지역이익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입지선정, ③공공시설 및 업무용 빌딩의 철저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전기조달 및 ZEB(Net Zero Energy Building) 유도, ④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⑤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 ⑥자원순환의 고도화를 통한 순환경제로의 이행, ⑦탈탄소형 지역육성, ⑧식량 등 농림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지속성의 양립
- (2) 기반적 시책: 정부 부처의 탈탄소 관련 시책의 중점화, ①지역의 탈탄소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구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메커니즘 구축, ②시민이 자발적으로 탈탄소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라이프스타일의 혁신을 촉진, ③사회전체가 탈탄소를 향할 수 있도록 제도혁신을 촉진
- (3) 지역과 생활에 있어서 탈탄소와 관련된 개별 분야별 대책 및 촉진시책: 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②주택 및 건축물, ③지역개발, 교통, 관광, ④지역경제 및 생활을 지탱하는 산업, ⑤순환경제로의 이행, ⑥지역생활 및 순환경제를 지탱하는 인프라, ⑦자연의 힘을 활용한 탈탄소화

지자체의 지구온난화 관련 조례 제정

- 2000년대 이후 도시부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구온난화 관련 조례를 제정
 - 초기에는 생활환경 관련 조례에 지구온난화 내용이 포함됨(2002년 북해도 삿포로시 생활환경 확보에 관한 조례, 2002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생활환경 보전 등에 관한 조례 등)
 -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독자적인 조례 제정(2004년 교토시 지구온난화 조례, 2007년 치바현 카시와시 지구온난화대책 조례 등)
 -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사업실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기금(동경도 미나토구 지구온난화등 대책기금 조례 등)
 -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조례(나가노현 이이다시 재생에너지 도입에 의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등)
- 일본 지자체의 지구온난화 관련 조례는 중앙정부의 온난화 관련 법률보다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음. 최근에는 적응에 관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고 규제대상도 소규모 사업자로 확대하고 있음

현황 및 시사점

- 중앙정부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탈탄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 및 시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지역의 탈탄소 정책은 효과적이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정부 부처의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은 정보, 예산 및 인재가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탈탄소 정책 시행의 중요한 인센티브
- 탈탄소 정책을 위한 로드맵의 설정 및 관련 정책 및 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평가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탈탄소 정책의 전체적인 평가는 시기상조
- 지자체의 지구온난화 관련 조례의 경우를 봐도 교토시, 요코하마시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지자체, 특히 인구감소가 현저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는 온난화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탄소중립선언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음
- 탈탄소 정책을 통한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 에너지 자립도의 증가, 에너지 비용의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는 사례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가를 위한 정보제공 등이 중요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탈탄소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진사례가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

참고문헌

- 釵持麻衣. (2021). 「都市自治体による温暖化対策条例の最新動向」『都市とガバナンスVol.35』, 135-147.
- 環境省. (2021). 「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2050年二酸化炭素排出実質ゼロ表明の状況」(<https://www.env.go.jp/policy/zerocarbon.html>, 2021년 12월 2일 열람).
- 内閣府. (2021). 「脱炭素に向けた地方自治体の取組について」(https://www.cas.go.jp/jp/seisaku/datsutanso/hearing_dai4/siryou2.pdf, 2021년 12월 2일 열람).

나성인 통신원

(히로시마수도대학 인간환경학부 교수)
nasungin@shudo-u.ac.jp

일본 지방의 협력적 지원 전략 「간사이 광역연합」

배경

- 2020년 10월, 문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으로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하였음
-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며,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 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임
- 국내에서는 부산·울산·경남권을 비롯해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에서 ‘메가시티’ 구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음
- 이에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적 연계·제휴·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간사이 광역연합’의 개요 및 추진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간사이 광역연합의 설립 경위 및 취지

- 일본은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공공단체로서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광역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행정기구인 광역연합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
- 광역연합은 집행기관과 의회를 두며, 의회는 간접 혹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됨
-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간사이 광역연합을 꼽을 수 있으며, 간사이 광역연합은 중앙집권체제와 도쿄 집중 완화를 통한 분권형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간사이 지역 2부 5현¹⁾이 결집하여 2010년 12월에 설립되었음(그림 1)
- 중앙집권체제와 도쿄 일극집중을 타파하고 광역 과제에 지역이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한 ‘분권형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 간사이 전체의 광역 행정을 담당하는 책임 주체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의 광역 연계와는 달리 집행기관과 의회를 가지는 새로운 행정 주체를 설립하여 광역 방재 대책, 광역 관광·문화

1) 교토부·오사카부(2부), 시가현·효고현·와카야마현·돗토리현·도쿠시마현(5현)은 설립 당시 참가하였으며, 오사카시·사카이시(2012년 4월), 교토시·고베시(2012년 8월), 나라현(2015년 12월)이 가입하면서 간사이 광역연합은 현재 2부 6현 4정령시로 구성되어 있음(자료: 간사이 광역연합 팜플렛, 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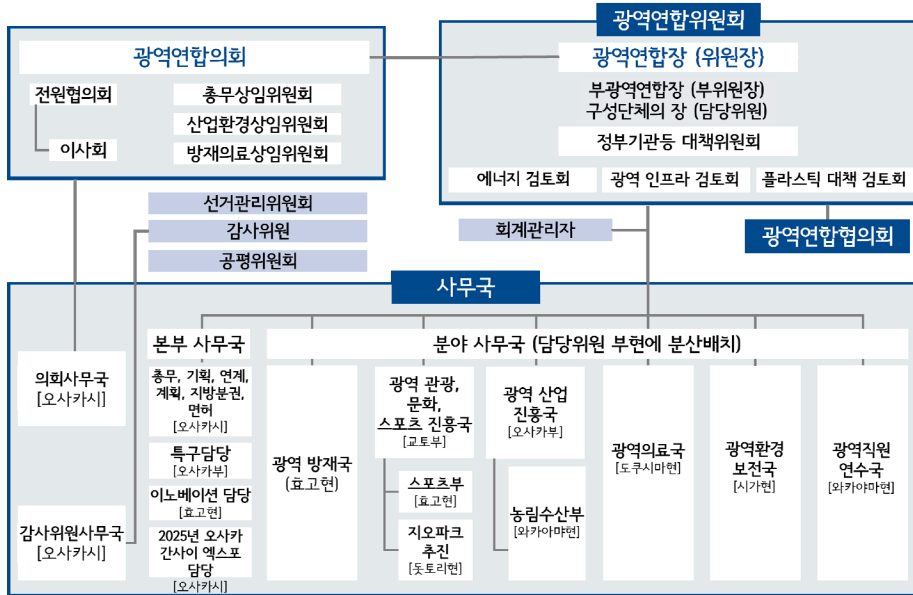
| 그림 1 | 간사이 광역연합 위치도

진흥, 광역 산업 진흥, 광역 구급의료 연계, 환경 대책, 교통·물류기반의 일체적인 운영관리 및 ‘광역행정을 전개’하고자 함

- 정부의 업무·권한 중 광역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이양받아 광역연합이 일원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여 ‘정부와 지방의 이중 행정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 표 1 | 간사이 광역연합의 조직 개요

조직명	간사이 광역연합
설립일	2010년 12월 1일
구성단체	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도토리현, 도쿠시마현, 교토시, 오사카시, 사카시, 고베시(연계단체: 후쿠이현, 미에현)
광역연합장	와카야마현지사(니사카요시노부)
부광역연합장	교토부지사(니시와키타카토시)
광역연합위원회	광역연합 운영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기본방침 및 처리방침을 광역연합장이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구성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면서 구성단체의 장의 주도로 각 분야의 사무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단체의 장이 사무 분야별 ‘담당위원’으로서 집행 책임을 갖는 간사이 광역연합 독자의 조직임. 합의에 의해 조직을 운영함
광역연합의회	광역연합의 의사기관으로서, 조례의 결정 개폐, 예산의 의결을 집행하는 등 보통 지방공공단체 의회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구성단체의 의회에서 선출된 39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광역연합협의회	광역연합의 실시사업 등은 물론, 간사이의 과제와 향후 방향성에 입각하여 광역연합의 미래상에 대하여 주민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협의함
사무국	총무기획, 지방분권대책, 자격시험, 면허 등의 사무를 소관하는 본부사무국을 설치하고, 그 외 분야의 사무를 맡는 분야사무국을 담당 위원부현에 설치하여 부현시의원이 광역연합직원을 겸직함. 또한, 광역연합협의회의 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을 설치함



자료: 간사이 광역연합 팸플릿 p.2(<https://www.kouiki-kansai.jp/material/files/group/3/R3-3.pdf>)

| 그림 2 | 간사이 광역연합의 조직도(2021년 4월 기준)

간사이 광역연합의 주요 계획 - ① 광역 방재

- ‘간사이 방재·감재 플랜’ 및 ‘간사이 광역 응원·지원 실시 요강’의 충실 및 발전
- 대규모 광역 재해를 상정한 광역 대응 추진
- 재해 시 물자 공급 원활화 추진
- 간사이 광역 응원 훈련 충실
- 방재 분야의 인재 육성



지원 물자 반송



마시마치 현지연락소



집적소에서의 물자 반출(오즈마치)



피난소 운영지원(기쿠요마치)

자료: 간사이 광역 방재국

| 그림 3 | 광역 방재 활동 모습

간사이 광역연합의 주요 계획 - ② 광역 관광·문화·스포츠 진흥

- ‘간사이 관광·문화 진흥계획’의 전략적 추진
-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월드 마스터즈 게임즈 2021 간사이’,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등의 관광 대책 추진
- 다양한 광역 관광의 전개로 간사이 방문객 유치
- 관민에 설립한 간사이 관광본부에 의한 대책 추진
- 간사이 문화 진흥과 국내외로의 매력 발산



자료: 간사이 관광본부

| 그림 4 | 「MATTA FAIR Kuala Lumpur 2017」

간사이 광역연합의 주요 계획 - ③ 광역 산업 진흥

- 간사이의 우수성을 살린 이노베이션 창출 기능 강화
-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재 확보·육성
- 음식 문화의 해외 홍보를 통한 수요 확대
- 국내외의 농림수산물 판로 확대



자료: 간사이 산업진흥국

| 그림 5 | 해외산업 프로모션

간사이 광역연합의 주요 계획 - ④ 광역 의료

- ‘간사이 광역 긴급 의료 연계 계획’의 추진
- 닥터 헬기를 활용한 광역 긴급 의료 체제 충실
- 재해 시 광역 의료 체제의 강화
- 과제해결을 위한 광역 의료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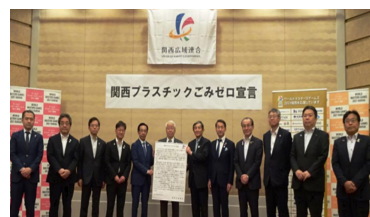


자료: 시가현 병원 구명 구급센터 youtube

| 그림 6 | 닥터 헬기

간사이 광역연합의 주요 계획 - ⑤ 광역 환경 보전

- ‘간사이 광역 환경 보전 계획’의 추진
- 탈탄소 사회 만들기
- 자연 공생형 사회 만들기
- 순환형 사회 만들기



자료: 간사이 광역환경보전계획

| 그림 7 | 간사이 플라스틱제로 선언

간사이 광역연합의 주요 계획 - ⑥ 자격시험·면허

- 중간호사·조리사·제과 위생사시험 실시 및 면허교부 등
- 독극물처리사·등록판매자시험 실시



자료: 간사이 광역연합 팸플릿

| 그림 8 | 자격시험 및 면허

간사이 광역연합의 주요 계획 - ⑦ 광역 직원 연수

- 정책형성능력 연수 실시
- 구성단체 주최 연수에 상호 참가
- 인터넷 연수 실시 등 연수의 효율화 강구



자료: 간사이 광역연합 팸플릿

| 그림 9 | 광역 직원 연수

간사이 광역연합의 주요 계획 - ⑧ 기타

- 광역 인프라 정비 촉진, 플라스틱 대책 추진, 에너지 정책 추진, 비와호, 요도가와 유역 대책, 특구 사업 전개, 이노베이션 추진,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대응, 여성 활약의 추진, SDGs 보급 추진 등

시사점

- 간사이 광역연합은 간사이 지역의 도도부현이 합의해 만든 일본 최초의 광역연합임
- 이는 지자체의 분권형 사회 및 광역 행정의 이정표를 제시하였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음
-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2022년 1월 13일 시행)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 지방자치에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임
- 보다 실효성 있는 광역연합 및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의 과제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광역연합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
- 광역연합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지원책 및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

출처

- 김준현, 「지역주도 '초광역 협력시대'...균형발전 새전략 '주목」, 국토일보, 2021.10.14.
-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초광역협력」, 2021.11.03

- 김예성·하혜영. (2021).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 입법조사처.
- 간사이 광역연합 팸플렛. (<https://www.kouiki-kansai.jp>) (2021년 11월 열람)
- 간사이 광역방재국. (<https://www.kouiki-kansai.jp/koikirengo/jisijimu/bosai/index.html>) (2021년 11월 열람)
- 간사이 광역관광본부. (<https://kansai.or.jp/>) (2021년 11월 열람)
- 간사이 산업진흥국. (<https://www.kouiki-kansai.jp/koikirengo/jisijimu/sanshin/index.html>) (2021년 11월 열람)
- 시가현병원구명구급센터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UQ1WQQA-ofk>), (2021년 11월 열람)
- 간사이 광역연합 광역환경보전국. (2020). 「간사이 광역환경 보전계획(제3기)」.

김지윤 통신원

(도쿄대학 도시공학전공 박사과정)

jiyoon-k@iis.u-tokyo.ac.jp

바르셀로나 슈퍼블록(Superblocks) 지역발전 프로젝트

개요

- 바르셀로나는 기존의 고밀도 자동차 중심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슈퍼블록 도시 개발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행자 중심의 도시 모델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 슈퍼블록 지역발전 모델은 도보 및 자전거 이동성 향상, 공공장소의 활성화, 생물 다양성 및 녹지공간 확대, 시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슈퍼블록 프로젝트 등장 배경

- 고밀도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는 바르셀로나 대기오염, 소음공해, 비효율적 공간이용, 교통 혼잡, 녹지 부족의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옴
- 바르셀로나 도시 중앙부의 2018 연평균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54 \mu\text{g NO}_2/\text{m}^3$ 및 $26 \mu\text{g PM}_{10}/\text{m}^3$ 로 WHO 기준($40 \mu\text{g NO}_2/\text{m}^3$ 및 $20 \mu\text{g PM}_{10}/\text{m}^3$)을 넘음
- 도시 중심부에 거주하는 주민의 55% 이상이 53dB 이상(WHO 권고안에 따른 최대 수치)의 소음에 노출됨
- 개인 승용차 및 오토바이 대비 공간의 면적을 살펴보면, 이들 교통수단이 도시 내 교통량의 26%만을 책임지고 있지만, 도시 공간의 50%를 차지 있음
- 바르셀로나 지역주민 평균 1인당 6.57m^2 녹지를 누리는 데 반해, 도시 중앙부는 주민 1인당 불과 1.85m^2 의 녹지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자동차 및 개인 이동 수단을 바탕으로 한 도시 모델은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에서 동떨어져 있으며, 도심 내 녹지공간을 늘리고 보행자 중심의 도심 구조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슈퍼블록 프로젝트 개요

-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슈퍼블록 프로젝트는 도심 내 녹지공간을 늘리고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 목표로 하는 새로운 도심 개발 계획을 실시함
- 이 프로젝트는 Les Corts 구역, Hostafrancs 구역, Eixample 구역, Poblenou 구역, Glòries 주변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바르셀로나 중심부의 약 660,260m² 공간에 21개의 가로수 거리와 21개의 광장을 새롭게 만드는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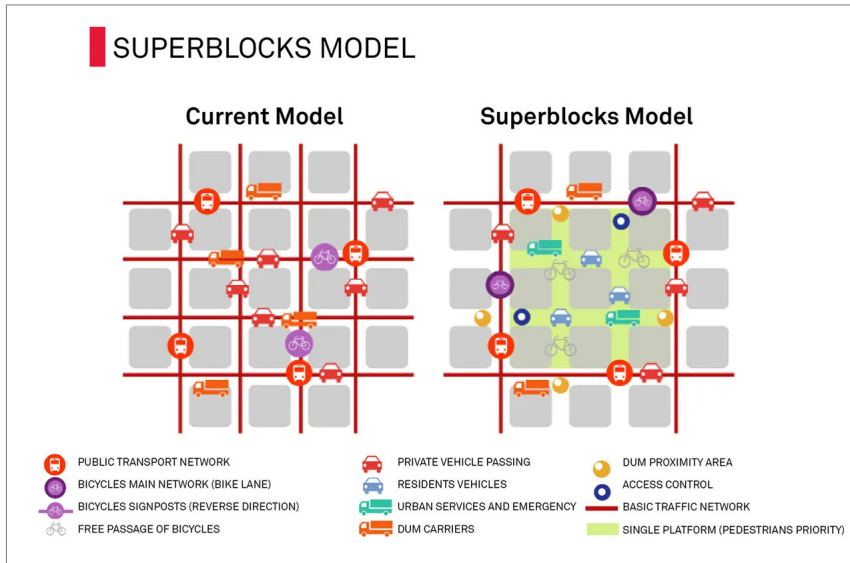
출처: Ajuntament de Barcelona

| 그림 1 | 슈퍼블록 프로젝트로 만들어지는 Eixample지역의 가로수 거리와 광장 지도

슈퍼블록 프로젝트 도시 개발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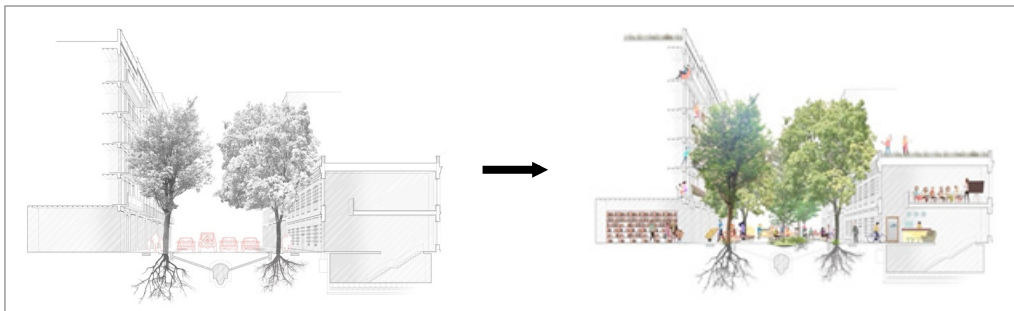
- 그림 2, 3과 같이 기존의 개인 자동차나 화물 트럭이 지나다니던 교차로들을 블록화하여 녹지 광장으로 만들며, 그 블록 안에서는 보행자, 자전거, 거주민 자동차, 도시 서비스 차량 및 긴급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이 프로젝트는 33.1km의 도로를 가로수 거리로 바꾸는 것으로, 총 334,750 m²(30.52%)에 해당하는 도심 내 녹지공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 슈퍼블록 프로젝트는 다섯 가지 목표인 (1) 지속 가능한 이동성 향상, (2) 공공장소 활성화, (3) 생물 다양성 및 녹지공간 확대, (4) 자원의 자급자족 활성화, (5) 시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합을 핵심으로 함
-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과 자전거 및 도보 이동의 연동성을 높이고 개인 자동차 및 화물 트럭의 도심 내 이동을 줄임
- 도심 내 녹지 및 가로수 거리를 조성하여 공공장소를 더욱 활성화하고 도시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가로수로 조성된 광장들은 도심 내 주민들이 거주지 반경 200m 이내에서 녹지나 도시 주요 시설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도시 개발 계획 및 적용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 도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요와 선호가 반영된 도시를 만드는 것을 강조함



출처: Barcelona Architecture Walks

| 그림 2 | 기존 도시 모델과 슈퍼블록 도시 모델 비교



출처: Barcelona Architecture Walks

| 그림 3 | 자동차 중심의 도시 모델과 가로수와 보행자 중심의 도시 모델 단면 비교

슈퍼블록 프로젝트 시사점

- 슈퍼블록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를 더욱 활기차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었으며,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관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음
- 도심 내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을 우선시하는 지역개발 모델은 공간

접근성 및 보행자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도심 내 대기 오염, 소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음

- 다용도 공간으로 개발된 광장은 시민들을 위한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도심 내 수송차량의 적재 및 하차, 도로변 주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도시 개발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개발에 시민들의 수요와 선호를 반영하는 것은 실제 도시 기반시설 및 환경의 소비자인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도시의 가치와 특성을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출처

- 바르셀로나 공중보건국. 「바르셀로나시의 대기질 평가」. 2018년 보고서
- 바르셀로나 시청. 「녹색 및 생물다양성 계획 2012-2020」.
- Barcelona Architecture Walks. (<https://barcelonarchitecturewalks.com>)
- Ajuntament de Barcelona. (<https://www.barcelona.cat>)

김새림 통신원

(Columbus State University; 정치행정학과 조교수)
kim_saerim@columbusstate.edu